

換率制度의 變遷

〈서울신문經濟部·記者〉

禹 弘 濟

만약 우리나라에서 1원으로 달걀 1개를 살 수 있고 美國에서도 1달러로 똑같이 달걀 1개를 살 수 있다면 원貨와 달러의 交換比率은 1대1이 될 것이다. 商品이나 用役을 구입하는 화폐의 구매력이 원貨와 달러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가가 제품의 생산공급 능력 부족이나 통화增發 등의 원인으로 뛰어들라 달걀 1개를 사는데 1백원이 든다면 美國돈과의 換率은 1백대1이 될 것이다. 즉 달러貨와의 교환비율은 1대1에서 1백대1로 인상되고 원貨의 달러에 대한 價値는 반대로 1백분의 1로 切下된다.

換率引上=評價切下의 等式개념이다. 그러므로 換率은 한나라 화폐단위의 對外가치와 경쟁력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購買力平價說은 이와같이 어느 나라 화폐의 구매력이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되어 換率이 결정된다고 풀이한 것이다. 이 說은 스웨덴의 「G·카센」이란 경제학자가 규명한 것으로 換율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購買力平價이외에 國際收支赤字幅의 축소를 겨냥한 정책적인 換率인상, 強勢통화에 대한 투기 등의 요인이 換율을 결정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 처음엔 15圓對 1 달러

우리나라 돈의 對外가치를 나타내는 換率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를 알아보자.

우리 돈의 가치는 오랜동안 美달러와 연결돼 왔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對美의 의존도가 컸기 때문이다.

美달러와 최초로 결정된 公定換率은 15圓대 1 달러. 해방이후 美軍政이 실시된 1945년 10월 1일의

일이다.

해방후 지금까지 두차례의 화폐개혁(화폐 호칭의 명목절하)으로 우리나라 돈의 명목가치가 1천분의 1로 떨어졌으니 당시의 15圓은 현재의 원으로 따져 0.015원이 되는 셈이다. 지금으로선 생각하기조차 힘든 환율이다.

그렇지만 이때의 환율은 단순히 美軍政이 우리나라 민간인의 勞役제공 등에 대한 보수지급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 뒤 우리 돈의 달러에 대한 換率은 계속 經濟 恐慌 뛰어들었다. 해방이후 日帝가 물러남에 따라 그들의 관리아래 있던 각종 생산시설의 가동이 중지됐고, 얼마후 6.25사변까지 맞아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물자부족으로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戰時의 財政인플레이도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환율인상을 부채질했다.

지난 74년 12월 7일, 환율은 1달러당 3백 98원 50전에서 4백 85원으로 인상이 된뒤 오랜동안 고정됐다. 그때까지는 해방이후부터 따져서 무려 32차례에 걸친 환율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 對充資金換率과 軍票

과거에는 公正환율 이외에 對充자금환율이란 것도 있었다. 원조물자를 국내에서 公売하면 업자들은 美國측이 정한 환율에 따라 우리나라 돈을 지불했다. 이때 지불된 우리돈의 적립금이 對充資金, 적용된 환율이 對充자금환율이다.

이 자금은 韓·美두나라 정부의 협의에 따라 주로 韓國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쓰였다. 일부는 美側 당국자들의 韓國內 활동비로도 사용됐다.

한편 美國은 달러가 자기네 나라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韓國에 주문하는 모든 美軍의 營內에서는 軍票를 쓰도록 했었다. MPC (Military Payment Certificate) 라고도 불리웠던 이 軍票는 暗달러시장에도 많이 흘러 나왔고 美軍 영내의 PX물품 부정유출을 크게 자극하는 등의 문젯점을 낳았다. 결국 이 軍票는 73년말쯤 美軍 당국과 의 협의에 의해 자취를 감추었다.

어쨌든 달러의 韓半島상륙은 당시 황량하기 그 지 없던 이 나라 경제의 부흥과 自立化의 기반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겠다. 해방 이후 엄청났던 인플레이션도 점령지구구제자금 (GARIOA) 등 美國의 달러지원으로 많이 가라 앉았다.

이러한 원조자금으로 들어온 消費財의 대량 공급으로 팽창됐던 통화가 조세등으로 흡수돼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흡수된 돈은 정부의 財政赤字를 메우는 구실도 했던 것이다.

得과 失의 제로섬현상도 일었었다. 美國상품구매 정책 (바이 아메리칸 폴리시)에 의해 원조자금으로 된 사들였거나 無償으로 들어 온 美國製品에 맞들여 소비성향이 크게 늘어난 이른바 洋風이 심하게 불었던 것이다.

嗜好수준도 갑자기 높아져 웬만한 國산품은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지 못해 외면을 당하기 일쑤였으니까 國내 생산업자들에게는 타격도 컸다. 그런 반면 품질향상에의 능력등 제품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뒤따랐으므로 산업발전을 자극하는 계기도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70年代에는 달러貨 弱勢

달러貨는 70년대를 줄곧 弱勢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越南戰에 의한 군비지출증대와 지난 73년과 79년의 원유과동에 따르는 財政지출확대 및 무역수지적자의 累增으로 달러는 약세 통화신세를 면치 못했다.

日本의 엔貨와 西獨의 마르크貨가 그들 나라의 국제수지흑자폭 확대로 強勢를 띤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당시 원貨는 달러와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바늘 가는 곳에 실 따라가는 식으로 평가절하가 돼 달러와 함께 약세가 된다.

원貨·달러·엔을 수출입에 적용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74년 1달러는 3백엔의 가치를 가

졌다. 그런 것이 75년 11월에는 2백47엔으로 떨어졌다. 당시 원貨는 74년부터 1달러당 4백85엔에 묶여 있었으니까 엔貨에 대해 자동적으로 가치가 떨어졌다.

또 우리 나라는 90% 이상을 대부분 달러로 국제결재를 하므로 종전에 우리 수출업자가 日本에 1달러어치를 수출하면 日本수입업자들은 3백엔의 부담이 있었으나 그후에는 2백74엔이면 족하므로 우리나라의 對日수출은 다소 늘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현실적으로는 日本의 韓國상품수입규제가 심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韓國의 수입업자는 1달러로 3백엔어치의 日本상품을 구입할 수 있던 것이 2백47엔어치밖에 못들여 오게 되는 것이다. 또 과거처럼 원貨가 달러와 고정환율제로 묶여 있을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엔이나 마르크 등 기타 통화국으로부터 들어온 차관 원리금상환부담이 늘어났다.

반대의 현상도 생각할 수 있다. 強勢통화국의 수출업자는 자국통화의 평가절상 (환율인하)으로 가격경쟁에서 불리해 진다. 따라서 75년 당시 美國은 달러의 약세를 어느정도 방관하는 대신 日本·西獨 등은 換市場에 개입해서 달러를 사들이고 自國通貨를 방출함으로써 계속적인 평가절상에 의한 불이익을 줄이려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 美國의 高金利政策 실시

그러나 지난 81년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형편은 크게 달라졌다.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 가운데 우선 인플레이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美國은 프라임·레이트 (優待금리)를 20% 이상이라는 미증유의 高率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美國의 고금리정책은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자본유출을 초래했고, 따라서 각국들도 앞을 다투어 金利를 따라 올릴 수 밖에 없었다.

高金利는 가뜰이나 침체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어서 각국 정부는 美國에 금리인하 요청을 거듭했다. 인플레이率이 다소 수그러들자 美國은 프라임·레이트를 점차 인하하기 시작했고, 현재에는 16.5%선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현행수준도 70년대초에 비해서는 2배 이상되는 높은 것이다.

美國의 고금리정책지속으로 달러貨의 가치는 70년대와는 정반대로 유럽 등 다른 선진국통화에 대

□ 特輯 : 換率과 油價 □

해 強勢를 보이고 있다. 또 美國은 國民總生産(GNP)에 대한 수출입의존도가 10% 안팎밖에 안되므로 통화강세에 따르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크게 우려할 것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유럽지역의 산업시설이 美國産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보다 많은 지출을 통해 美國의 자본재를 수입해 쓰느라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美國의 高金利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貨의 강세를 초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환율조정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價値의 오름폭과 기타 통화의 내림폭 사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外換시세 동향이다.

◇ 現行 複數通貨바스켓 制度

현행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美國·日本·西獨·英國·캐나다 등 5개국 통화의 加重值를 감안한 複數通貨바스켓제도이다. 오랜 고정환율제가 일시에 환율을 올려 물가에 충격을 주는 폐단을 없애고 適正수준의 流動化를 꾀하기 위해 지난 80년에 바스켓제도로 바꾼 것이다.

바스켓이란 말은 한 바구니속에 여러 나라의 통화를 담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한 바구니에 담긴 각국 통화가치와 자국통화가치를 비교해서 환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쓰이는 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창출한 특별인출권(SDR)도 바스켓에 의해 그 가치가 계산되고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5개국 통화 가운데 달러가치는 오르는 반면 다른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은 주로 달러가치와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外外결제의 90% 이상을 달러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對美달러換率의 움직임은 보면 81년12월 말 1달러당 7백원50전하던 것이 올들어 4월 3일 현재 7백18원80전으로 2.61%가 올랐다. 그러나 엔貨의 경우 지난 연말 1백엔당 3백18원96전에서 같은 기간동안 2백91원37전으로 8.65%가 떨어졌다. 美달러에 대해선 換率이 2.61% 오른 반면 엔貨에 대해서는 오히려 8.65%가 인하된 것이다.

西獨의 마르크도 지난 연말 1마르크당 3백11

원19전에서 올 4월 3일 현재 2백99원88전으로 우리 원貨에 대해 그 가치가 3.64%(11원31전 어치)가 떨어졌다. 英國파운드에는 3.99%, 프랑스 프랑貨는 1.97%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日本 및 對 유럽 수출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美國을 제외한 日本·西獨 등에 대해선 가격경쟁상 우리측이 환율인하폭(평가절상폭)만큼 불리한 것이다.

◇ 換率 1% 오르면 原油導入追加負擔 450億圓

현재 우리나라의 對美수출량은 전체의 26% 정도이다. 수출업체가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을 원활히 할수 있게끔 환율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日本 및 유럽지역의 수출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複數通貨바스켓制度를 채택한 것은 주요국에 대한 수출비중과 각 통화간의 가치를 비교, 환율이 實勢를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복합요인을 감안하면, 현재 1.97%의 환율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환율조정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換率을 인상하면 수출은 잘 될것이지만, 換率인상폭의 절반 정도가 물가상승요인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原油수입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 81년의 경우 운임보험포함가격으로 계산한 原油수입대금은 63억 7천 6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換率이 1%만 올라도 약 4백50억원의 추가부담이 따른다. 환율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금리·통화·저축·생산제품 가격 등 각 부문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정책이 강행되어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업체들도 환율인상을 았더라도 수출상품의 價格 및 非價格경쟁에서 상대적인 劣勢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방법만이 산업구조의 高度化와 국제경쟁력강화를 꾀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70년대 중반 西獨이나 日本의 換率이 다른 통화에 대해 인하되는 추세에 있었음에도 그들 나라가 국제수지 黒字확대의 혜택을 누린 것도 이들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이 比較優位를 고수할 수 있을만큼 꾸준한 품질개선노력을 기우린 때문이다. *